

# 2027년 원전설비 10조 수출목표 민관, 대형 프로젝트 수주 '총력'

원전설비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  
지원예산 작년 69억 → 올 355억  
공관·무역관 설치 등 지원 추진  
지난 1년 8개월간 4兆 수출계약

원전설비 수출 10조원 달성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창원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2027년까지 원전설비 10조원 수출' 달성 방안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 세계 가동원전은 415기이며,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된 전 확대로 원전설비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신규원전 일괄수주뿐만 아니라 원전설비 수출이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작년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2년 33억원, 2023년 69억원에서 올해 35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원전수출 중점 공관(8개소)·무역관(10개소) 설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13개사를 선정해 지원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작년 말까지 1년 8개월간 총 105건, 4조866억원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5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맨 오른쪽)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킷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년간(2017~2021년) 수출 계약액 6000억원의 6배 이상에 해당한다.

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사업과 단일 설비 역대 최대인 2600억원 규모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주수했고, 단품 기자재, 운영·정비 서비스, 소형모듈원전(SMR) 설계 등 분야에서 총 103건, 7500억원 규모 성과를 창출했다.

이런 흐름에 이어 2024년 5조원, 2027년 10조원의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총력을 펼친다. 우선 사업 규모가 크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원전 개보수, 발전기 교체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역량을 집중한다.

동시에 규모는 작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 교육·훈련, 진단·검사 등으

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원전수출보증 특별지원(1250억원),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확대(13개사 → 30개사), 원전수출특별전 개최(2024년 12월), 중점무역관 추가지정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 이집트·루마니아 기자재 수출계약(71개 품목, 7700억원)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수출 의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원전설비 4조원 수출의 원동력이 됐다"며 "2027년 10조원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산업부, 국가로봇테스트필드에 2000억 투입

첨단로봇 경제 전담반 1차 회의  
대구시 달성군에 16.7만㎡ 규모 조성  
올해부터 착수... 2027년 시범운영

정부가 로봇산업 실증과 사업화 기능을 수행할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무역보협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첨단로봇 경제 전담반(TF)' 1차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TF는 강경성 1차관을 위원장으로 2개 분과, 37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보급, 제도개선 등 첨단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에는 국비 1305억원을 포함해 약 2000억원이 투입되고, 대구시 달성군에 16.7만㎡ 규모로 올해부터 조성에 착수한다. 가상·실 실증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실증평가 기술개발 등이 진행되고 2027년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TF에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이외에도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 2024년도 규제혁신 추진실적과 계획, 첨단로봇 보급확산 추진방향 등에 대



대구시 달성군 소재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

한 안전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은 로봇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플랫폼, 부품, SW 등 5개 분야, 67개 핵심기술을 제시했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성공적인 인프라 조성을 위해 산업부(정책지원), 대구시(부지확보, 인허가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집행관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사업총괄, 인프라 구축)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날 기관 간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51개 과제 중 20개 과제를 완료했고, 올해는 순찰로봇, 방역

로봇 도입을 위한 지침 제·개정 등 20개 이상 과제 완료를 목표로 했다.

신규 규제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한다. 첨단로봇 보급확산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공공, 민간 분야에 로봇 보급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로봇 거리조성 등 지역별 보급전략 등이 제시됐다.

이날 논의된 안전은 구체화되는대로 로봇산업 정책심의회(위원장 산업부장관)에 상정, 확정될 예정이다.

강경성 1차관은 "테스트필드 조성, 기술개발, 보급 확산, 규제개선 등 첨단로봇 경제 TF가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韓 성별 임금격차 '1위'... 재생에너지는 '꼴찌'

통계청 '韓 SDG 이행보고서 2024'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이 되레 악화되고 있고 남녀 간 임금격차는 주요국 중 가장 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그치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1일 사회·환경·경제 등 각 분야 지속가능성을 통계 데이터로 진단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한 17개 SDG 목표별 한국의 이행현황을 담았다.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지난 2022년 기준 총 인구에서 0.324로 전년 대비 소폭(0.005) 줄어 개선됐다. 그러나 66세 이상 은퇴자나 이대의 지니계수는 0.383으로 1년 전보다 0.005 늘어났다. 노인 빈곤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 또한 간극이 여전했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2.1%)을 크게 웃돈

다. 또 여성관리자 비중은 OECD 평균이 34.2%에 달한 반면 한국은 14.6%로, 회원국 중 2번째로 낮았다.

상대적 빈곤율도 2022년 15.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올랐다. 빈곤율은 2017년 이후 내림세를 보이던 재작년에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또 2023년 기준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1.9%에 달했으나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54.2%에 머물렀다.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한시적 임금근로자가 59.7%, 비전형 임금근로자가 50.8%, 시간제 임금근로자가 33.6% 순이었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2020년 기준 3.6%로 OECD 평균인 14.9%의 1/4 수준에 그쳤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6억7600만 톤(CO2e q.)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다음으로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민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발전하려면,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이 보고서가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농식품부, 마트에 수입과일 2000t 공급

aT 통해 오렌지·바나나 등 직수입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들여온 오렌지·바나나 등의 공급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해 직수입한 오렌지 및 바나나 등 수입과일을 이날부터 대형할인마트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수입과일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 최대 20% 할인해 공급하고, 대형마트는 소비자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자체 할인까지 더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바나나 1400톤, 오렌지 600톤 등 2000톤 이상

를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또 지난 18일 직수입 품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파인애플·망고 등도 최대한 빠르게 도입하여 다양한 수입과일을 3~4월 중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은 현재 7만6651톤의 통관이 완료됐다. 망고 및 파인애플 등은 할당관세 적용 이후 소비자 가격이 각각 41.7%, 10.7%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환경부, 삼성전자 등과 '물 위기' 대응

'워터 포지티브' 구상 주도적 대응

정부가 국내 주요 대기업과 손을 맞잡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응한다는 '국제사회 구상(글로벌 이니셔티브)'과 관련해 주도적 참여에 나선다.

환경부 오는 22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네이버, CDP코리아 등과 기후변화 대응과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워터 포지티브' 구상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워터 포지티브의 개념에는 기업 내 용수 확

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유역 내 수자원 추가확보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최근 국제사회에 극한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의 물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산업공정 전반의 필수 자원이자 대체재가 없는 자원인 물의 고갈은 전 세계 산업에 실제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으로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협의체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관리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